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7년 11월 30일(금)

23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사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어백(02-2279-9631)

2007년 단체교섭 합의

기본급 2.6%인상, 복지기금 700억 출연, 초등학생 교육보조비 지원 등

단체교섭 가립정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1.7%의 찬성으로 가립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12일 단체교섭 협정서에 정식 조인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조합이 5년 동안 노사불신의 벽을 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에도 불신의 벽을 제압했다”면서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타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회사가 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수 사장은 “교섭결과가 성장사업을 위한 노력들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노사 상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위원장과 조합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찬반투표 결과 및 2007년 단체교섭 합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합의사항

- 임금인상
- 기본급 2.6% 인상
- 초과근무수당확대 및 초과근무가산급 지급기준 변경
- 노동조합에서 철회
- 복지기금
- 노동조합창립기념일과 회사 창사기념일 각 5만원씩 인상 (기존 5만원 ⇨ 10만원)
* 2008년부터 적용
- 보육시설 광역시도 3곳 추가: 강북지방본부 해화, 부산지방본부 본부, 전남지방본부 본부
* 2008년 중 시행
- 복지기금 총 700억원 출연 (별도출연분 90억원 포함)
- 초등학생 6학년에 한해 1년간 매월 10

만원 지원
*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풀이) 올해 6학년은 내년 1,2월은 받을 수 있으며, 올해 5학년은 내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받을 수 있다.

- 지원직 환직
- 전원 환직 합의
- 약 1200여명 해당
- 임금테이블, 직급조정 등의 문제로 2008년 3월 말까지.
- 단체협약 개정
제31조(명예퇴직) 2항 신설
② 명예퇴직 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기 노사합의사항 반영

제40조(부당공제의 금지) 중 5호 및 7호 내용추가
5. 개인연금(연금저축포함)
7. 주택자금대부금(생활안정대부금 포함) 및 상환학자금대부금



- 제57조(휴식시간) 1항 개정
'115전보점수요원' 삭제하고, 대신 '국제전보 점수요원' 삽입
- 제89조(복제) 개정
(유니폼) 회사는 조합원의 유니폼을 하계는 5월1일부터 동계는 10월 1일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며 유니폼지참개정 및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한다.
* 기 노사합의 사항 반영
- 제9조(주택자금대출): 삭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 해고자 복지
- 1명 합의
-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내년 노사관계 협의회를 열어 문제해결키로.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투표자	투표율(%)	개표 현황			찬성율(%)	반대율(%)
			찬성	반대	무효		
29,910	27,220	91.0%	19,516	7,573	131	71.7%	27.9%

IPTV법안 국회 방송통신 특위 통과

전국사업권 허용... 자회사분리 명시 안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2면) 이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IPTV 사업자에게 전국 사업권을 허용하되 필수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는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료방송시청기구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

하고, IPTV 사업시행 후 1년간은 시장 점유율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특위는 또 KT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할 때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망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망

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망등등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IPTV법에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는 융합기구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IPTV 소관부처는 기구통합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KT네트웍스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

KT네트웍스노동조합(위원장 김대근)이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2단계 투쟁에 돌입했다. 네트워크노동조합은 11월 16일 전체 대의원이 참석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10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특별기금 모금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은 11월 16일을 기점으로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략홍보팀, 교섭법무팀, 조직팀 및 지원팀으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가 쟁의행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키로 결정하였으며, 특별기금 모금에 대한 방법과 금액에 대한 논의를 병행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D등급제 폐지!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여, 생존권 사수라는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사측의 인사권 남용과 대가발령, 불성실교섭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삼성 무노조 철폐대책팀 구성

민주노총이 '무노조 기업 삼성'에 대해 투쟁대책팀을 구성해 전략적으로 노조를 건설하는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삼성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뇌물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삼성의 부정부패 기간에는 노동착취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최고 수준의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흑독합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유와 억압으로 노동자들을 길들여 온 무노조 경영으로 초과이윤을 뽑아낸 것이 원동력이 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초일류 노동착취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라며 삼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무노조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급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략적 조직화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를 통해 삼성의 부패비리를 감시감독하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2007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2008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예) 쌍꺼풀,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키텀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소득세법 제76조)
 - 10만원이내: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소득공제
 -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확충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 대상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추가
 - 체육시설 설치·등장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육단 등
 -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고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고습과정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함
 -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인됨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2)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연 50만원
 - 자녀3명: 연 150만원
 - 자녀4명: 연 250만원
-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특수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③)
 - ※ 혼인, 이혼, 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 이혼,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IPTV 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전국서비스가능... 망 동등 접근권 명시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가칭)'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법안 문구의 문제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오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TV 수상기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했다.

IPTV 제공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등 각 분야별로 전체 PP(플랫폼제공사업자)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다. 예컨대 TV 분야의 PP가 전국에 200개 업체라면 이중 5분의 1인 40개 업체까지만 경영할 수 있다.

▲외국인 소유제한

외국인은 IPTV 제공 사업 법인의 지분 49%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 정부 및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외국인 소유제한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업의 허가 및 기간
IPTV 제공 사업을 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사업 신청서는 방송위와 정통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양측 모두에게 사실상 이중허가를 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경경쟁 촉진
방송위원장과 정통부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9명의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IPTV 제공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쟁상황 평가 방법과 기준, 평가위원회 설치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권역
1개의 면허를 받아 전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전국면허가 수용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방송위와 정통부의 허가를 받아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에도 IPTV 제공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장점유율 제한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시장 점유율을 5분의 1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는 사실상 KT를 염두에 둔 경과규정으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유예기한을 둔 것이다.

▲경영금지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IPTV 제공 사업 법인의 지분 49%를 초과해서 소유할

▲망 동등 접근
통신망을 보유한 IPTV 사업자는 IPTV 사업을 위해 망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하는



다른 기업에 보유설비의 부족이나 영업 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도 없다.

▲이용 요금
IPTV 제공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서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IPTV 제공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실시간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을 준용해 내용심의의 받아야 한다.

▲사업자의 출연
방송위원장과 정통부장관은 IPTV 제공 사업자에게 IPTV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및 정보화 촉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그중

안 준조세 성격의 출연금으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요금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출연금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도 많았는데 또다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허가 정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정통부장관은 방송위와 협의해 IPTV 제공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사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친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대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제공 사업을 한 경우나 망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경우 등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PTV 법제화 일지

- ▲2004. 10. = 광대역통합망(BcN) IPTV 도입 필요성 제기
- ▲2005. 10. = 유승희 의원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발의
- ▲2005. 11. = 김재홍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 ▲2005. 12. = KT 여의도 미디어센터 개설 및 시연
- ▲2006. 1. = 정통부 및 방송위 개별 법안 준비 착수
- ▲2006. 1. = 방송통신실시준비 TF 가동
- ▲2006. 7.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유추위) 발족
- ▲2006. 8. = 정통부 방송위간 고위정책협의회 개최(IPTV 공동사업법안 합의)
- ▲2006. 10. = IPTV 시범사업자 선정 KT·다음 선정
- ▲2006. 11. = 유추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확정
- ▲2006. 11. = IPTV 공동사업서비스 개시
- ▲2007. 1.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 ▲2007. 4. = 유추위 IPTV 법안 다수안·소수안 확정
- ▲2007. 6. = 홍창선·손봉숙·서상기 등 의원 IPTV 법안 발의
- ▲2007. 7. = 국회 방통특위 IPTV 법안심사 개시
- ▲2007. 11. 15. =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다수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2007. 11. 20. = 국회 방통특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가칭) 의결
- ▲2007. 11. 23. = 국회 방통특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수정 의결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문제 많다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도 도입 문제점 지적

IT연맹은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1월 16일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세션 4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 워크숍'에서 '통신사업 관련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을 발제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해당 사업자의 기본적인 단체행동권 제약은 물론 노동삼권 자체도 훼손될 위험성이 있음을 밝혔다. 11월 13일 노동계의 반발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신사업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통신장비의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맹은 도입된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체 가능한 통신수단이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한 점,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조건, 기기의 발달과 서비스 고급화로 파업 여파가 미비하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들을 집중 조망하고, 제도 자체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대 이광택 교수의 사회로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및 IT연맹이 현안 문제를 가지고 발제하였으며,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영겔베르츠 사무총장이 국제노동기준과 대조한 전체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발제를 마친 토론회는 OECD 노동자문위원회(TUAC) 로라트 슈나이더 전문가, 김남근 송영섭 변호사의 입장을 담은 패널 토론을 가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여파로 공익사업장에 밀어닥친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대체성 판단 없는 통신 필수유지업무 철회하라!

내년부터 통신 사업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11월 13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 등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로써 해당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더 근본적으로 단결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은 모조리 삭제되었다.

지난 해 정부는 노조법 개악과 올 7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긴급조정도 존치 등을 근간으로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차단시켰다. 이 번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을 무마시키는 구체적인 악법으로 '노동기본권 삭제법'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노사 자율로 정하게끔 외국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결정(강제중재)을 후속 조치를 강제하여 노사 자율 결정 등 자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 파업 현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파업 종료 후 현장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통신 분야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관리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와 처리로 결정할 바, 이는 사업 대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행동권을 삭제하라는 뜻과 같다. 통신은 과거에 대체재가 없는 필수 수단이었으나, 현재 이동통신 확대보급 및 자유로운 번호이동제도 도입과 인터넷 발전으로 그 전통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유선 전화 등 전체 13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경쟁하는 통신시장을 보더라도 소비자는 그만큼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번 개정안은 급변한 통신환경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수월한 노동자 통제를 법으로 보장하는 '노무관리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확정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관련 사업 노동자들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단지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묵살한다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 11. 13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IPTV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IPTV법제화 논의를 환영합니다. 최근 IPTV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한치 앞을 못보고 있던 IPTV가 활로를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IPTV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있어서 고용창출이 지대할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IPTV법안이 이권과 기득권 문제로 인해 누더기가 될까 우려합니다. 이미 IPTV는 전세계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은 규제법안의 마련이 늦어져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 등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IPTV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PTV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IT연맹이 우려하는 점은 사업자의 이권문제, 기득권문제로 인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독점하고 있던 선발사업자가 자신을 스스로 약자라고 우기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진입은 비용증가와 투자축소의 요인이 됩니다. 이는 곧 다양한 콘텐츠와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결국 국민부담(요금인상)만 가중시켜 IPTV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결정적인 장벽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다수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토론을 통해 IPTV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하지만 3년 넘게 토론을 벌여온 법안이 졸속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입니다. 오히려 결정이 늦어져 IPTV에 대한 선진 기술력이 사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IPTV법안에 대한 윤곽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기대와 경제발전, 고용확대를 위해서 하루빨리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2007.11.19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일년에 한번, 우리는 만나야 한다

전북조합원들, 10회 맞는 축구대회에 대한 자부심 대단해

아침 일찍부터 전주시 체련공원이 북적 거린다. 여기저기 KT마크를 단 차들이 보이고 체육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간다. 11월 중순이라 찬바람이 “찌~”하게 파고드는데도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다.

이들은 16일 전주시 체련공원에서 열리는 전북지방본부위원장기 축구대회 참가자들이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축구대회가 전북지방본부 연중행사로는 최대 규모라고 한다. 참석자만도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북지방본부 인원의 1/3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양정우 전북지방본부위원장은 “매년 10월 정도에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임단협이 늦게 끝나 축구대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끝까지 축구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해 추운 날씨지만 강행하게 됐다”고 밝힌다.

회합 단결의 장으로 승화

한 조합원은 “일년에 딱 한번 전북의 전체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올해 개최되지 않았다면 정말 서운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축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우 기다려지는 행사겠지만 일반 조합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의도 다지고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다”며 부듯해 하는 눈치다.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퇴직선배가 찾아와 색소폰을 멋드러지게 연주한다. 조합원들은 또 그런 선배를 보면서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흥에 겨운 조합원들은 선배의 색소폰 반주에 맞춰 트롯트 한 가락을 뽑아내고 조합원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을 해준다. 이런 와중에도 여성조합원들이 커피잔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김장 담그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직원 모임인 원더우먼회라고 한다. 그들에게 오늘 같은 행사가 ‘대목’이다. 사람 많은 곳이라면 그만큼 돈도 잘 모이는 법. 이런 기회에 커피를 팔아서 전주시내 동사무소와 연계해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술잔을 앞에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간다. 한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40-50대라면서 우리처럼 신규인력을 뽑지 않는 곳이 드물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옆에 있던 조합원은 “잘나가는 회사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직원에 대한 서비스가 최고수준”이라면서 “경영진들의 자기집처럼 아끼고 지식들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뿐만 아니라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문제들이다. 조합원들과 함께 하면서 경영진들이 바로 이러한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KT의 발전을 위해 고

민해야 할 것인데 하며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았다.

전북조합원들의 전통이며 자부심

11월의 냉기가 전북지방본부 조합원들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하루 종일 운동장을 뛰는 선수들과 이를 보며 응원하는 조합원들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도 없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선배까지도 찾아오는 축구대회. 도심지 조합원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됐을 이런 행사가 전북지방본부 조합원들에게는 전통이며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밀양지부 탐방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 받자

우리 지부장은 모든 것이 만능, 밀양의 '제갈공명' 이다



밀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밀양 아리랑, 얼음골, 영남루 등등 대부분 역사적으로 오래된 곳. 전통이 숨쉬는 곳이라는 상상이 머리 속을 채운다. 밀양지부를 방문하기 위해 기차역에서 내려자 역시 여느 시골처럼 단층 건물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황진한 지부장은 밀양을

대구에서 60Km, 부산에서 60Km, 창원에서 50Km가 떨어진, 어떻게 보면 매우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그만큼 큰 기업도 없고 대다수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뒤쳐진다는 말이다. 지부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자 등산, 마라톤, 축구 등

등 건전모임 사진이 즐비하다. 40여명도 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다는 밀양지부에 대한 집행간부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들은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조합원부라는 이름을 떠나 모두가 가족과 같다고 한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들 친척, 선후배, 이웃이다. 이렇듯 실타래

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이다 보니 누구네 집 대소사는 물론이고 손가락 숫자까지 아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집행간부들에게 황진한 지부장이 어떤 사람이나고 몰았더니 밀양지부의 '제갈공명' 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모든 일에도 만능이고 조합원들의 고

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면서도 사무실 순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한다.

● 다음은 황진한 지부장과 일문일답이다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념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이다. 조합원들을 단지 일꾼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조합원들이 대부분 20년 넘게 일한 프롤레타리아들이다.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접받도록 하는 것이 지부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조합원들에게 어떤 지부장이 되고 싶다.

조합원들에게는 관리자들과 직접 부딪치지 말

고 지부장에게 말하라고 강조한다. 저 또한 고충사항이 접수되면 조합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부서장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후 지점장에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조합원을 드러내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는 지부장이 되고 싶다.

평소 건전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건전활동은 마라톤, 등산, 배드민턴 등을 하는데 조합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배

드민턴은 생활체육대표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숫자가 얼마 안되다 보니 규모가 큰 건전활동은 별로 없다.

지부부서장은 어떤 분들인지.

부서장들은 자기부서의 업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긴급출동 등 업무에서도 솔선수범해야만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부서장들은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다. 함께 시작한 만큼 끝까지 지부를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채신공제조합 파산업무 진행 및 향후 일정

채신공제조합 파산결정(9%) 이후 지금까지 공제조합에서는 마지막 청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현재로부터 배당시점까지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된다. 다음은 채신공제조합 파산 업무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이다.

조합해산 및 파산경과

- 1999. 6.25. 채신공제조합 해산 결의(6. 29. 해산등기)
- 1999. 7. 1. 청산절차 진행
- 1999. 8. 6. 조합원 거출원금 지급개시
- 2000. 4.24. 조합원 할증금 산정액의 50% 지급개시
- 2000. 5.18. 조합의 파산신청(6. 5. 파산선고)
- 2000. 7. 2000년도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 (2000.12.21. 승소하여 26억원 환급받음)
- 2000. 9. 5. 파산채권 신고개시
- 2000.10. 5. 1차 채권자집회 개최 (채권신고자 82,932명, 채권신고액 90,984백만원)
- 2002. 4.12. 서울타워 매수자가 제기한 건물하자보수 소송 확정판결 (청구금액 3,013백만원, 확정금액 2,236백만원)
- 2004. 3.29. 파산자 경기은행 부실채권 중 일부 채권 환매 (439백만원)
- 2004. 4. 8. 공제조합에서 항소한 할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서 강제조정(최후 배당금 초과금액을 조합에 반환

토록 결정)

- 2007. 9.20. KTF 주식 25만주 매각 완료(77억원)
- 2007. 9.27. 경기은행 잔여 채권(특정금전신탁) 일괄 매각
- 2007.10.11. 특별기일(제2차 채권자 집회) 개최하여 채권액 확정 (채권신고자 1,452명, 19억원)
- 2008. 1월 말경 배당실시 예상

조합 자산 및 채무현황

○ 자산 현황 (2007. 10월말 현재)

과목	금액	비고
은행 예치금	18,900백만원	
법인세 등 예상액	-1,800백만원	* 마감까지의 제경비 포함
계	17,100백만원	

○ 파산채권 신고(조합 채무) 현황 (2007. 10월말 현재)

채권자	신고	미신고
채권자	84,380명	292명
채권금액	94,973백만원	104백만원

* YTN 소송확정 판결액 2,236백만원 포함.

향후 계획

○ 배당준비 및 배당을 결정

- 보유예금에서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경비 등을 공제한 후 약 17% 내외 배당 전망
- 배당허가 신청
- 배당표 작성
- 배당의 공고 및 이의 신청
- 배당실시
- 배당통지(법원과 협의 후 약식절차 기대)

○ 전산 준비

- 배당결정에 따른 전산 개발 및 시뮬레이션
- 송금은행 결정 후 송금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 협의 및 프로그램 개발

○ 배당실시(조합원 송금)

- 소속국으로 배당 안내 공문 발송
- 송금불가, 반송분에 대한 조회 및 재송금
- 계좌변경 요청 조합원 처리 및 전화응대
- 송금 마감 후 배당금 지급 명세서 출력 보관

○ 공탁

- 최종 송금 불가 조합원에 대한 공탁준비 및 공탁

- 공탁서 등 제반 서류(은행 입금표 등) 작성
- 파산업무 종료 후 공탁금 출금에 대한 안내 (파산관재인, 정보통신부 협의)

* 법원은 공탁함으로써 업무를 종결할 것으로 보이나 송금불가 조합원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산업무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배당내역 조회 및 공탁금 출금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안내기간 약 2-3개월)

○ 계산보고

- 파산법에 따라서 모든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경과 및 재무 상황 보고

* 계산보고를 정식으로 할 경우 85,000여 조합원의 참석 또는 참석위원의 절차가 필요하나 장소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담당법원과 약식절차 또는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음.

○ 배당 이후의 업무

- 회계장부(최근 5년분) 등 파산관재인 인계
- 불필요한 문서 폐기(일부 정보통신부 인계)
- 법인, 직원 세금 정산
- 법인 채무 면책 신고
- 법인 등기 말소 등

KT노동조합, 범민중 총궐기대회 참가해

“노동자 민중이 이땅의 주인으로 우뚝서자”

KT노동조합은 IT연맹을 비롯한 단위로 조합원과 함께 11월 11일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진행된 '2007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의 구호를 외쳤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권이 “37년 전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했고, 37년이 흐른 오늘 날 다시 정해진 열사가 또 몸에 불을 당겼다”며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을 촉구하면서 “노동자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마음을 먹으면 이 나라 골간을 확실히 뒤흔들 수 있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이 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서자”고 강조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곧바로 진행된 범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도, 500만 자영업자를 모시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총매진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청 앞에서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 조치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벌이던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몸 바쳐온 선배

들의 피, 땀, 눈물과 원한이 아직도 서려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7년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세종로네거리를 점거한 1만여 대오는 이날 저녁 7시50분, 경리집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글귀를 적은 대형성조기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12월 1일 2차 범민중총궐기 투쟁을 기약하며 해산했다.

한편 이에 앞선 10일 오후에는 흠예버 상암점 남문쪽 왕복 12차선 도로를 점거해 연좌투쟁을 벌여 흠예버 매장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동NTT노동조합 방문

양국 통신상황,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 논의

동부 NWJ(All NTT Workers Union of Japan) 가토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13명이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KT노동조합을 방문하여 각국 통신산업의 현황과 대응방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을 주제로 논의하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자재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NTT노동조합과는 그동안 꾸준히 교류를 진행해왔으며 회사도 NTT도코모의 KTF지분 보유, KT의 일본 와이맥스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 등으로 최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 장단점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토 동NWJ위원장은 “양국이 유사한 통신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공통의 과제가 많을 것”이라면서 “통신산업의 매출과 수익감소·비용증가에 대한 의견, 정치상황 변동으로 통신분야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첫날 『통신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양국의 통신규제와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KT는 발표문을 통해 통신 역무통합, 결합판매, VoIP 등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 로드맵과 IPTV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IPTV 사업 관철을 위해 노동조합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NWJ는 음성부문의 퇴조와 광통신사업 부문



의 약진 등을 소개하고 조합원의 고령화로 말미암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NTT 내에 과건직, 계약직, 파트타임(시간제) 등 비정규직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정규직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날 토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양국의 양상이 비슷했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또한 유사했다. 양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과 육아, 교육을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NWJ는 KT노동조합의 모욕시설 확대와 양성평등 노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

이기도 했다.

이밖에 동NWJ 간부들은 KT의 와이브로 전시관인 'W Style Shop'과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 드림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통신발전상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특히 와이브로는 가입자상황, 사용자들의 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한편, 동NWJ는 NTT의 자회사인 동NTT에 소속된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NTT는 일본 동부지역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회사로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통적인 유선사업을 하는 곳이다. 동NWJ의 조합원 수는 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신형IP폰(RIMS폰) 공급

2005년 공급된 구형 IP폰의 노후화 해소를 위해 신형 IP폰을 공급할 계획이다.

- 공급대상 : RW - 6100이하 기종 사용자
- 공급기종 : SPH - M8100(충전킷, 블루투스 이어폰 포함)
- 공급시기 : 2007년 11월 30일까지
- 공급방법 : KT렌탈을 통한 리스 방식 공급
- 요금지원 : - 음성통화 5만2천원
- 무선데이터 무료(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금액 등은 개인부담)
- 와이브로 요금 무료(와이브로 유료콘텐츠는 개인부담)

